

서울시교육청, 시각장애 교원 AI·에듀테크 전문성 높인다

AI·에듀테크 장애인교원지원단
‘동료 교원 주도형 지원체계’ 핵심

연수에 전문가 참여… 실효성 높여
매뉴얼 접자·오디오북 형태 보급
시각장애 학생 지도에도 활용 기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AI·에듀테크 장애인교원지원단’을 꾸리고, 시각장애 교원의 수업 활용을 돕기 위한 맞춤형 연수를 시작했다. 시각장애 교원 주도의 새로운 지원 체계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과 수업 접근성을 대폭 높인다는 구상이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단의 핵심은 시각장애 교원이 중심이 되는 ‘동료 교원 주도형 지원 체계’다. 참여 교원들이 AI·에듀테크 도구의 접근성과 수업 활용성을 직접 탐색·실습해 역량을 키운 뒤, 향후 타 시각장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확산을 도모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AI·에듀테크 장애인교원지원단’을 꾸리고, 시각장애 교원의 수업 활용을 돕기 위한 맞춤형 연수를 지난 10일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

으로 확산을 도모한다.

연수 과정은 사전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회의를 거쳐 시각장애 교원의 실제 수업 환경과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설계됐다. 특히 2025년 AI·에듀테크 선도교사단, 시각장애인 대상 AI·디지

털 연수 강의 역량이 있는 외부 전문가, 웹접근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연수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총 6일간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과정을 통해

접근성을 고려한 AI·에듀테크 서비스 목록과 기본 매뉴얼을 제작해 접자와 오디오북 형태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시각장애 교원의 수업 준비와 운영을 지원할 뿐 아니라, 시각장애 학생 지도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현장에는 어떤 에듀테크 플랫폼이 접근 가능한지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각 교원이 개별 탐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교원과 비장애 교원, 접근성 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원단을 구성해 연수와 연구를 병행, 현장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수에 참여한 지원단 소속 시각장애 교원은 “AI와 에듀테크는 나의 수업에서 불가능했던 영역을 열어주는 새로운 눈과 손이 되었다”며 “앞으로 아이들과의 수업도 더 넓고 풍성하게 펼쳐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AI와 에듀테크는 모든 학생과 교원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게 하는 도구여야 한다”며 “시각장애 교원들의 도전과 실천이 교실을 넘어 교육현장 전체의 혁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문해·수리력 진단’ 에스플랜, 전국확산 첫발

서울시교육청-부산시교육청 ‘맞손’
CBT 시스템 활용 동일한 환경서 진단
타 시·도 교육청과의 연대 확장 도모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주도한 문해력·수리력 진단도형 ‘에스플랜(S-PLAN)’이 부산시교육청과의 공동 운영을 통해 전국 확산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2023년 서울시의회 지원으로 전국 최초 개발된 S-PLAN은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가 검증된 컴퓨터기반 검사(CBT) 진단도구로, 학교 현장에 축적된 문해 개발 프레임워크와 운영 경험을 타 시·도로 공유하는 선도 모델이 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두 교육청은 내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구축

한 CBT 시스템을 함께 활용해 동일한 환경에서 진단을 실시한다. 문해 개발 워크숍에는 양 시·도의 교사가 공동 참여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진단 결과가 수업 개선과 맞춤형 지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피드백 체계를 정비한다. 2026년부터는 공동 문항을 직접 개발해 함께 사용·운영하는 단계로 협력을 확대, 표준화된 진단·분석 플랫폼을 기반으로 학년·학교·지역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기 협의제도 가동한다. 기술 교류와 인적 교류를 병행해 채점·통계·보고서 자동화 같은 운영 기술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문항 풀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력을 발판으로 타 시·도교육청

과의 연대도 넓혀 공동 연구·기술 개발·정책 연계를 추진, 진단·수업·평가의 선순환을 전국 단위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부산을 시작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 S-PLAN을 확산하는 첫 걸음”이라며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 맞춤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청 간 협력은 교육 혁신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18일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은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개발 및 운영’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식을 갖고 협력을 공식화한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5070 중장년 경력전환·재취업 지원

오는 23일 일자리박람회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23일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광주’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시군 순회형으로 추진하는 ‘경기 5070 그레이트잡투어(Gray it-job tour)’의 일환으로, 50~70대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레이트잡투어’는 중장년층을 상징하는 Gray, 주목받는 It, 일자리를 찾아가는 Job Tour의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시는 전통제조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중장년층의 직무

전환과 재취업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뿌리산업, 물류 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 연계 채용뿐만 아니라, 재교육 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재무 상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행사 현장에는 보성특산교역, 구광폴립먼트 등 지역 우수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과 1대1 면접을 진행하며, 현장 참여가 어려운 기업은 채용게시대를 통해 이력서 접수·전달 방식을 활용한다. 총 40여 개 기업이 이번 박람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광주시일자리센터, 광주시니어클럽 등 지역 유관기관이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광명시, 전국 최초 ‘기본사회 조례’ 제정

내달 2일 공포 동시에 효력 발생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며 기본사회선도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지난 17일 열린 제 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오는 10월 2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담겼다. 특히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돼, 시민 주도의 정책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위원회는 시장과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을 포함해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등 최대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추천 의원,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13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에서 기본사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명시

다양한 시민 대표가 참여해 정책 전반에 시민 의견이 반영된다.

광명시는 그동안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꾸준히 시민 참여 기반을 마련해왔다. 지난 3월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2025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109건의 제안을 접수했고, 이 중 7건을 실행안으로 확정했다. 또 지난 13일 열린 ‘500인 원탁토론’에서는 438명의 시민이 참여해 45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광명(경기)=김대의 기자

‘서울 캠퍼스타운’, RISE 연계로 첨단산업 창업 지원

서울대·중앙대 등 13개 대학 선정

서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등 13개 대학이 참여하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이 올해 출범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계해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창업의 지속 성장 체계로 강화된다. 창업팀 발굴부터 기술사업화·글로벌 진출까지 대학의 전주기 지원을 확대해 서울을 청년 창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대학·자치구와 함께 청년 창업가에게 공간과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2026년부터 수행할 13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선정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다.

‘서울 캠퍼스타운’은 시와 대학, 자치



서울시청. /메트로신문

구가 대학이 가진 공간과 인재를 창업 기반으로 활용해, 창업팀발굴·육성·사업화 등 전 주기에 걸쳐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창업 육성 사업이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올해 출범한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와 연계해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 대학은 2026년부터 기본 2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대학별 12억원 씩 총 156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각 대학은 학교별 특화 분야 중심 세부 프

로그램을 설계해 연간 50팀 이상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할 예정이다.

2년 차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우수대학(70%)에는 사업 기간 연장(최대 2년) 및 사업비 차등 지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반면, 성과가 미흡한 대학(30%)은 3년 차부터 사업이 중단되고, 시에서 재공모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히 창업 공간을 확충하는 단계를 넘어,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스케일업(Scale-up) 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질적 성장 체계로 전환해 2030년까지 39개 이상의 ‘아기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캠퍼스타운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 중인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혁신거점과 연계해 창업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